

충남지역 고령화 대응력 분석

허 문 구 I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고령화의 파고를 넘어라

‘고령화 대응력지수가 뭐지?’

급속한 고령화현상은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난제가 됐다.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저하와 사회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성장 및 지역발전은 지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며, 모든 지자체들은 이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지역이 성장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구구조, 즉 고령화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인간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2-3주간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아도 2-3일 후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를 흔히 발견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적 영향도 있겠지만 평소 운동이나 음식 섭취 등을 통해 감기에 대응하는 길항력이 자신도 모르게 축적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고령화 대응력도 이와 같은 이치다. 예컨대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할 경우 그 지역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지자체는 생산성의 감소분을 상쇄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증가 또는 기술혁신(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투입을 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여긴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뒤 나타나는 정책투입에 대한 성과는 모두 고령화 대응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본고는 지자체의 이러한 행위(즉 정책투입)를 경제, 산업, 보건, 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고령화 대응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충남, 고령화 수준 높지만 노화(老化)는 가장 늦은 인구구조’

충남지역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곳이다. 2013년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16.1%로 이미 고령지역(7-14% 미만)으로 진입했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생산인구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충남 지역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노인층의 부양을 위한 지출 증대로 복지예산의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 이 수치로만 보면 충남의 장래는 우울하다.

그러나 고령화 수준이 아닌 진행 속도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충남의 늙어가는 속도(노화현상)는 전국에서 가장 늦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충남이 한 살을 먹을 때 충남보다 젊은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이 이보다 더 많은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다. 즉, 1993-2013년 동안 고령화 비중의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 2.2배, 부산 3.3배, 서울 2.8배 늘어난 반면, 충남은 1.8배 증가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인구 연령층이 충남으로 유입되어 인구구조 노화현상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충남의 인구구조상으로 볼 때 불행 중 다행이다.

‘충남, 고령화 대응력 전국 2위 . . . 부문 간 불균형 커’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는 4.20으로 경기(4.38)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3.78) 3위, 대전(3.57) 5위를 차지하여 충청권 3개 지역은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유형은 경제(경제·산업) 및 생활(보건·복지) 활력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활력지역으로 분류되어 높은 고령화 대응 능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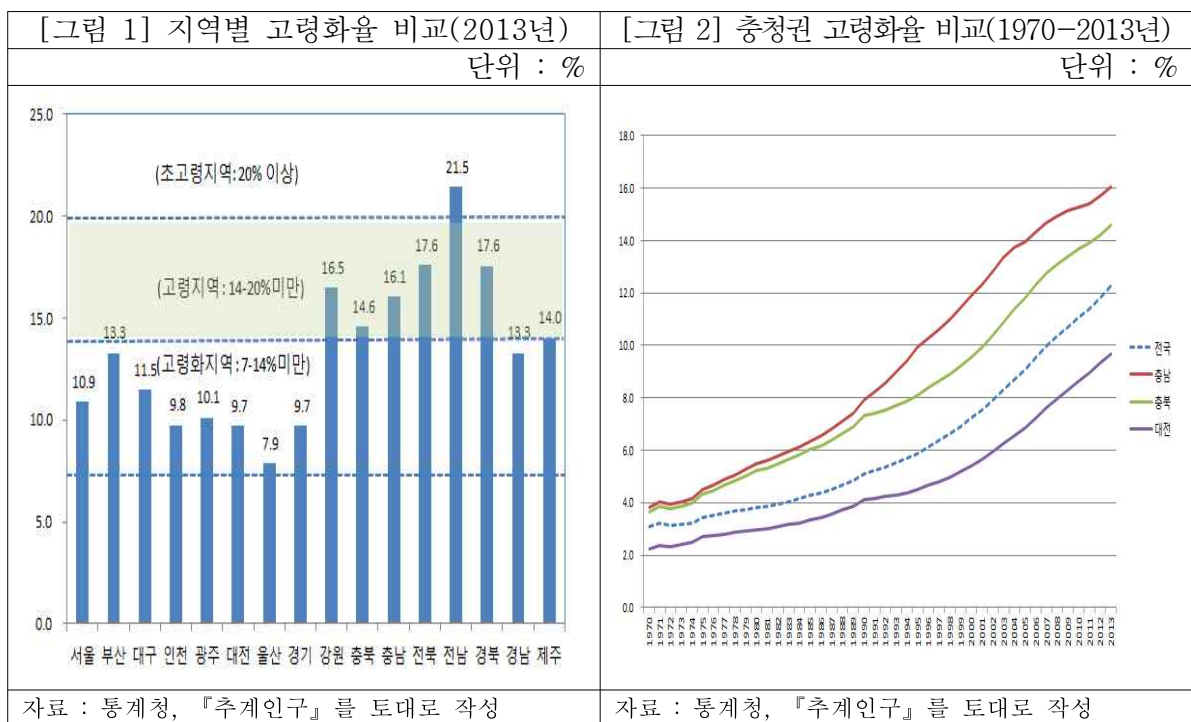
그러나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부문 간 불균형은 상당한 수준을 나타낸다. 즉, 경제 활력 지수는 3.0으로 전국 1위이나, 생활 활력 지수는 1.20으로 7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및 산업 영역에서는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했으나, 보건 및 복지 영역은 6위와 7위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제조업의 집적에 따른 활발한 생산활동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보건 및 복지 영역을 대변하는 생활 측면에서의 정책투입에 대한 미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충남이 고령화 대응력을 더욱 제고하려면 생활활력의 근본적인 요인인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1. 충남지역 고령화 특징

‘빠르게 늙어가는 충남’

- 우리나라 지역별 고령화율에 관한 특징은 수도권과 광역시가 낮고 비수도권의 도(道) 지역이 높은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은 16.1%(2013년 기준)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수도권 및 광역시의 모든 지역은 고령화지역(7-14% 미만)에 속하는데 비해 경남을 제외한 모든 도 지역은 고령지역(14-20% 미만)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전남의 고령화율은 21.5%로 유일하게 초고령화지역(20% 이상)으로 분류되었음.
- 충남의 고령인구 비중 추이는 충청권 내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전국 평균 및 권역 내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인구구조 조로(早老)현상은 전국에서 가장 늦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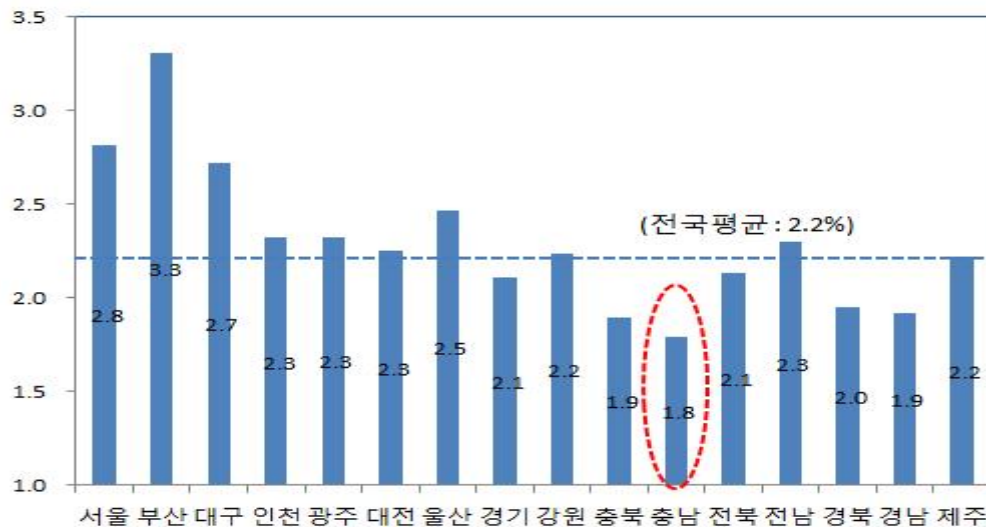
-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의 충남의 고령화 진행 속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고령화 수준 추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음.
- 즉, 1993-2013년간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이 2.2배 늘어난 반면, 충남은 1.8배

증가에 그쳐 전국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이는 20-24세 청년층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그 감소분 이상으로 25-64세의 생산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인구구조 조로현상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충북의 경우도 동 기간 1.9배 증가에 불과하여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화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대전은 2.3배 증가하여 충청권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 이에 비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모든 지역들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 ‘인구구조 조로현상’이 두드러져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도시권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를 확인할 수 있음.
- . 특히, 부산의 고령인구 비중은 20여년 만에 무려 3.3배나 증가했으며, 서울과 대구도 각각 2.8배, 2.7배나 늘어났음.

[그림 3] 최근 20년간 고령화 진행 속도

단위 : 배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를 토대로 작성

2. 충남지역 고령화 대응력지수 산출결과

‘고령화 대응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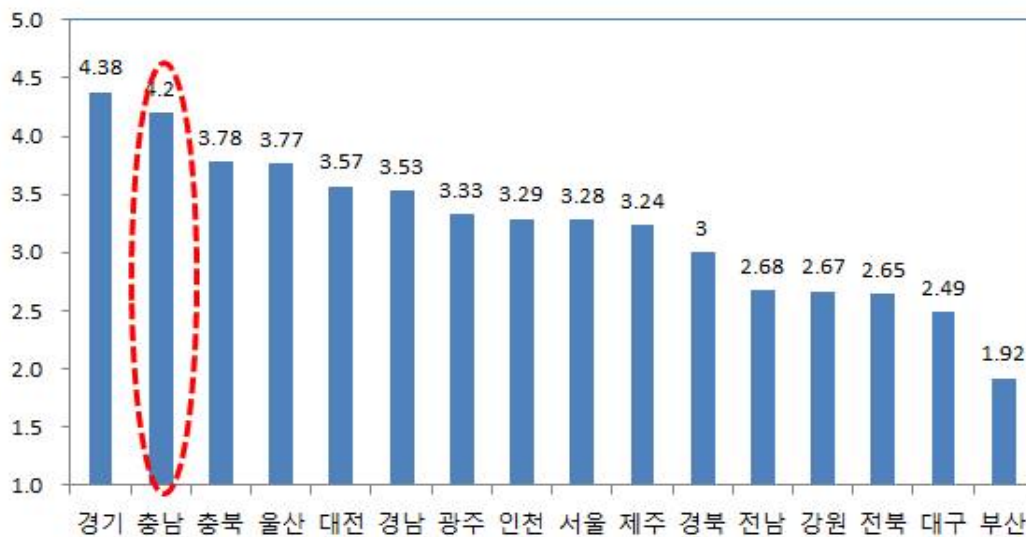
- . 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미흡할 경우 향후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고령화 대응력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고령화 대응력 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 산업, 복지, 보건 등 4개 영역에 걸쳐 대응 정도를 산출할 수 있는 29개 세부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각 지역의 영역별 대응 수준을 현재와 미래 변화를 예측한 잠재력을 포함한 종합지수로 환산한 것임.

‘고령화 대응력지수 전국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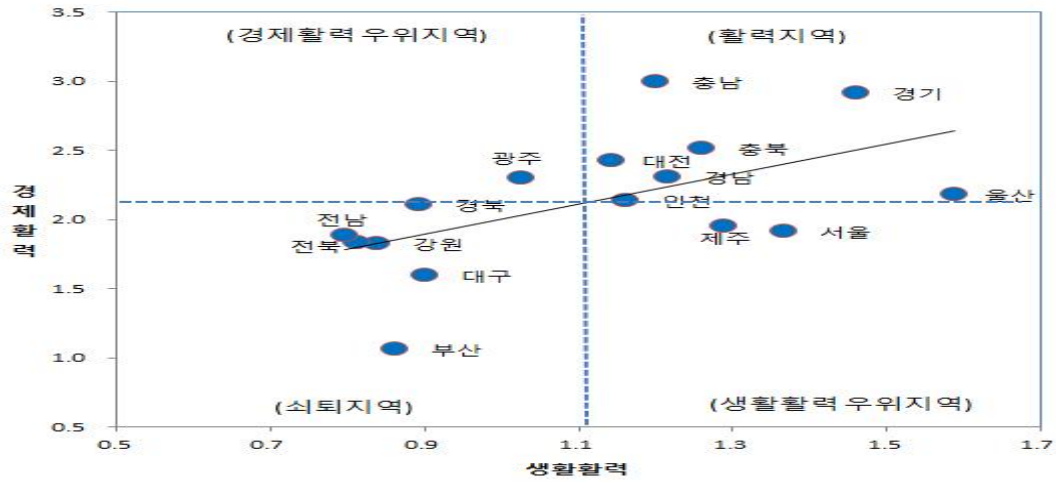
- 충남의 고령화 대응 종합지수는 4.20을 기록하여 경기(4.38)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여 높은 고령화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 충북의 종합지수도 3.78로 3위, 대전은 3.57로 5위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충청권의 고령화 대응 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 산출결과



-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유형은 경제(경제·산업) 및 생활(보건·복지) 활력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활력지역에 포함됨.
- 대전과 충청북도 활력지역으로 분류됨으로써 총 7개 지역 중 충청권 지역이 43%나 차지하고 있음.
- 반면, 부산 및 대구 등의 광역시와 전통적 낙후지역인 전남·전북·강원 등 6개 지역이 경제 및 생활 활력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쇠퇴지역에 속함으로써 활력지역과 쇠퇴지역 간 고착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 고령화 대응력 유형별 평가결과



자료 : 산업연구원

‘경제·생활 활력 간 불균형 심화’

-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이 전국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부문 간 지수의 불균형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즉, 경제 활력 지수는 3.0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생활 활력 지수는 1.2로 7위에 불과하여 보건 및 복지 영역의 고령화 대응 정도가 경제 및 산업 영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 경제 및 산업 영역에서는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하여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보건 및 복지 영역은 각각 6위와 7위로 중위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영역에서는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전국 1위) 및 높은 노동생산성(2위)이, 고령인구보다 생산인구의 빠른 증가(1위), 산업영역에서는 지식기반산업 취업자 비중(3위), 낮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1위), 외국인 근로자 비중(2위) 등의 요인이 고령화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음.
-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충남이 고령화 대응력을 제고하려면 생활 활력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1> 부문별 고령화 대응력지수 산출결과

	경제		산업		보건		복지		경제활력		생활활력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서울	0.99	15	0.93	1	0.68	3	0.68	3	1.92	11	1.37	3
부산	0.71	16	0.35	12	0.41	14	0.45	14	1.06	16	0.86	13
대구	1.23	14	0.37	11	0.44	12	0.46	13	1.59	15	0.9	11
인천	1.52	12	0.62	5	0.49	10	0.67	4	2.13	8	1.16	8
광주	1.76	5	0.54	7	0.56	7	0.47	12	2.3	6	1.03	10
대전	1.54	10	0.88	3	0.56	7	0.58	9	2.43	4	1.14	9
울산	1.69	7	0.5	8	0.73	1	0.86	1	2.19	7	1.59	1
경기	2.01	2	0.91	2	0.72	2	0.74	2	2.91	2	1.46	2
강원	1.52	12	0.31	14	0.3	16	0.54	10	1.83	14	0.84	14
충북	1.91	3	0.61	6	0.66	4	0.6	8	2.52	3	1.26	5
충남	2.24	1	0.76	4	0.58	6	0.62	7	3.0	1	1.2	7
전북	1.54	10	0.3	15	0.46	11	0.35	16	1.83	13	0.81	15
전남	1.7	6	0.19	16	0.42	13	0.38	15	1.89	12	0.8	16
경북	1.64	8	0.47	10	0.39	15	0.5	11	2.11	9	0.89	12
경남	1.81	4	0.5	8	0.56	7	0.66	5	2.31	5	1.22	6
제주	1.61	9	0.34	13	0.66	4	0.63	6	1.95	10	1.29	4

자료 : 산업연구원(2014)

3. 고령화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생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투입’

- 충남지역이 효율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 및 복지 부문 중심의 정책투입이 요구되며, 이들 부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인구 유입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 충남의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 1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부양비(노년부양비+유소년부양비)는 전국 1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총부양비가 높다는 것은 복지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이들의 부양비로 지출됨으로써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복지부문의 투입이 감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많은 생산인구가 역내로 유입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생산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젊은 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으로부터 생산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창조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창의인재 육성’

- 최근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이며, 이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 구현’이 자리매김했으며 각 부처는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거나 준비 중에 있음.
- 충남지역에서 창조경제가 실현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함.
- 도시의 창조성을 강조한 리처드 플로리다(R. Florida)는 관용성과 다양성이 혼재되고 창의 인재가 집적된 도시일수록 경제성장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와 인재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임.
- 특히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이 제조업이라는 점과 향후 충남의 먹거리를 창의인재와 관련성이 많은 첨단제조업에서 찾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창의인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창의인재 유치에 경쟁우위를 가진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고령화 대응력지수 지표체계

	4대 영역	3대 부문		세부지표		
		변수	가중치	변수	가중치	
경제활동	경제	결과 변수	0.6	자본장비율(유형고정자산, 2009)	0.25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GRDP 증가율(2005-2010)	0.25	
				노동생산성(GRDP/총취업자, 2010)	0.25	
				총인구 대비 대졸이상 인구 비중(2010)	0.25	
		기저 변수	0.2	생산가능인구 비중 증가율(2000-2010)	0.50	
				생산가능인구 증가율-고령인구 증가율(2000-2010)	0.50	
		지속 가능성	0.2	생산가능인구 비중 증가율(2010-2020)	0.50	
				생산가능인구 증가율-고령인구 증가율(2010-2020)	0.50	
	산업	결과 변수	0.6	총취업자 대비 R&D인력 비중(2010)	0.20	
				총취업자 대비 지식기반산업 취업자 비중(2010)	0.20	
				고용증가율(2005-2010)	0.20	
				인구 천명당 특허 건수(2010)	0.20	
				총취업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2010)	0.20	
		기저 변수	0.2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2010)	0.50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증가율(2000-2010)	0.50	
				지속 가능성	0.2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2020)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증가율(2010-2020)	0.50				
생활활동	보건	결과 변수	0.6	고령인구 일인당 총요양비(2010)	0.33	
				기대수명(2010)	0.33	
				출생아 십만명당 영아사망률(2010)	0.33	
		기저 변수	0.2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2010)	0.50	
				총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중(2010)	0.50	
				지속 가능성	0.2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2020)
	총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중(2020)	0.50				
	복지	결과 변수	0.6	빈곤율(수급자, 2010)	0.33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2010)	0.33	
				여성 일인당 합계출산율(2010)	0.33	
		기저 변수	0.2	인구 100명당 총부양비(2010)	1.00	
				지속 가능성	0.2	인구 100명당 총부양비(2020)

자료: 산업연구원